

“시장경제는 속죄양이 아니다”

장상환 교수의 《시장경제와 그 적들》 서평에 대한 저자의 반론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다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본인이 내놓은 《시장경제와 그 적들》에 대한 장상환 교수의 서평(《출판저널》 제210호, 3월 20일자)을 보면서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싶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혼동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는 자유주의자와 평등주의자 사이에 현저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앞세우는 지식인들은 진보라는 용어를 일찍부터 점령해버렸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진보는 선의요, 그 나머지는 보수와 우익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사람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만큼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있을까? 이 점에서 장교수와 필자는 생각을 달리한다. 장교수는 필자의 글을 현실의 변화를 부정하는 보수주의자의 글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위협적이다. 현실실정정을 넘어서 현실정당화론이라고 할 수 있고, 현실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 이념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한국인의 번영을 위한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다섯가지 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모든 '특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다. 합당하지 못한 기득권을 없애자는 주장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있을까? 이 점에서 장교수는 보수주의와 저자가 주장하는 자유주의를 혼동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자 세계관이다. 여기서 치열함이란 결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존하려는 인간의 열의나 노고를 말한다. 이들이야말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세상은 시장기능의 확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시장원리를
뿌리내려 강한 한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장실패는 오히려
장교수가 지적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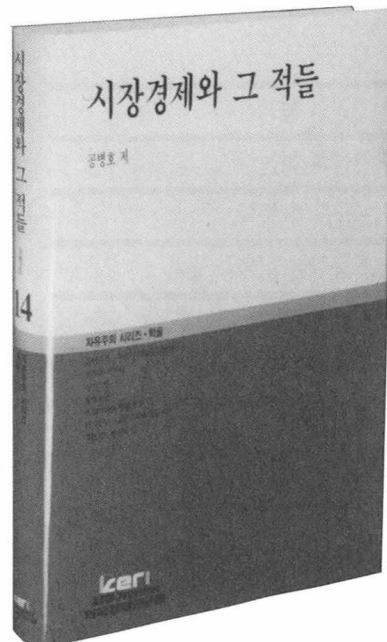
다음으로 장교수는 한국 경제에서 시급한 것은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 정부개입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그대로 두면 빈익빈 부익부, 독점의 심화, 공황, 실업 등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이같은 지적은 좌파 지식인들이 즐겨 읽는 고전들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독점의 심화나 공황, 그리고 실업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시장경제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조차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미증유의 풍요를 인정해야만 한다. 배고픈 한국인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집없는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준 것이 시장경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묻고 싶다.

또한 장교수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중소기업의 약화, 환경파괴, 노동자 건강파괴, 농업피폐, 지역 불균형, 불평등, 권력남용 등의 문제는 대부분 시장실패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의 속죄양으로 시장경제를 지목하고 있다.

편견에 기초한 주장에 동의 못해

우선 시장경제가 환경파괴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자. 환경은 일종의 사치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 지불할 여유를 갖게 된다. 대



표적으로 주요 도시별 대기오염실태나 수계별 수질오염실태를 보자. 환경오염이 생활형편과 함께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황산가스는 서울의 경우 80년의 0.094ppm에서 93년 0.023ppm까지 나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배고프던 과거가 아름다웠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이 더 나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편 60년대 이래로 재해를 자료를 보면 노동자의 건강파괴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재해도수율만 하더라도 66년 23.1%에서 93년 2.7%까지 급락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피폐는 시장경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개방이나 기술의 변화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농업이 낙후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히려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경제력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라도 지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밖에 지역불균형이나 불평등, 그리고 경제력 집중의 심화에 대해서도 장교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지식인들이 펼치는 주장은 스테레오 타입화된 편견에 기초해서는 안된다. 어떤 주장이라도 객관적이고 엄밀한 증거에 기초한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장교수의 주장은 시장경제를 '밀림 속의 결투'로 보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룬다. 시장경제는 생산자들끼리의 결투다. 그러나 결투의 뒷면을 보라. 이 결투는 동물들처럼 먹고 먹히는 싸움이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이익과 만족을 주기 위한 결투다. 승자는 밀림처럼 힘센 자가 아니고 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킨 자이다.

밀림 속의 결투는 한쪽이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시장 속의 결투는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사회에 안겨준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경쟁을 밀림 속의 결투에 비유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뿐만 아니라 경쟁이란 인간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내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시장경제를 억제하지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인간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재능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경쟁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들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후퇴시켰는가 다시 논의할 필요조차 없지 않은가.

대안제시도 명확치 않아

또 장교수는 “그동안의 정부규제는 시장기능을 증폭시키고 결국 소수의 대자본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결국 재벌주도 경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교수의 대안제시는 명확하지 못하다. 시장기능의 강화는 작은 정부, 규제완화, 그리고 민영화로 대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간에 세상은 시장기능의 확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시장원리를 이 땅에 뿌리내림으로써 작지만 강한 한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교수가 지적하는 시장실패는 필자가 보기에 오히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장교수의 서평을 읽으면서 이 땅의 평등주의자들이 관념의 세계를 벗어나,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세계를 직시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